

민주, 정개·사개특위 선택 다음주 결정

여야 北 목선 국조 놓고 공방 한국당·바른미래 수용 촉구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지연

여야가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 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정과 정



더불어민주당 이혜찬(오른쪽)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5·18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수용한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에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에서는 한국당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말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단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광주수영대회, 경제효과 클 것”

광주시의회서 간담회…“광주형 일자리 힘 보태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이며, 경제적으로도 활성화 돼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는 좋은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하고 “사무실 책상에 광주수영대회 마스코트 인형이 놓여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수영대회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예산이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후관리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다”며 “광주 시민이 국제대회를 연다는 자부심도 있고, 공개적으로 사명감도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해 지방발 전특별법 예외사항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또 “호남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경제와 외교 문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일부 보수층에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중간지대가 크게 열릴 것이다”며 “누가 중간지대를 장악하느냐가 내년 선거의 관건이며,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내부 싸움이 일고 있지만 제3당의 존재가치가 인정되면 충분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노조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기업들에게도 투자는 하라고 하는데 기업이 투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저희도 5·18망연 의원 정제나 5·18특별법 처리를 빨리 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재구성해 5·18 망연 의원 정제에 나서겠다”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靑 “고유정, 법원 엄정 판단 지켜보아야”

사형 청원에 답변…“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세균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청와대 SNS를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답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자 다시 집으로 피해자를 옮겨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한 달간 34만7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간간 살인은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해당 청원은 5월 20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7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공연음란 및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학대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靑 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



정구철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정구철(56)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신임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강정수(48) 미디어리 대표를 임명했다.

정 신임 비서관은 한성고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디어오늘 기자, 한국기자협회보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강정수 신임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용산고와 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베를린자유대 경제학 학사·석사, 독일 비텐-헤어데케대 경제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경원 “붉은 수돗물·일본 통상보복 재앙 수준”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야당의 경고 귀 기울여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약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양상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중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특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고 강조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은명초 화재사건, 경

제위기와 일본의 통상보복 등을 ‘재앙’이라고 거론한 데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쫓아내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남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칸데르급 미사

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하고,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선부론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관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